

# 與野, 김건희 여사 '동행명령장 발부' 등 계속되는 공방

## 법사위 국감

김 여사·최은순씨 증인 불출석  
與 “영부인 동행명령장, 전례 없어”  
野 “특권·성역 넘어서 평등 지켜야”  
대통령실 바리케이트에 전달 못해  
검찰총장 탄핵·명태균씨 공방 지속

국회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21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씨가 출석하지 않자 야당 주도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야당 의원들과 국회 직원들이 김 여사에게 직접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 위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했으나 경찰 제지로 무산됐다.

◆ 동행명령장 발부에 與 “망신주기용”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감 시작 전에 김건희 모녀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했다. 여당은 상정 즉시 이에 반발했다. 광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영부인에게 동행명령권을 발부하는 과거 전례가 없었다. 망신주기 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라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이근태, 이성윤 의원이 2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관저 인근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던 도중 경찰에 가로막혀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도 “특권이 아니라 국가 제도상의 영부인이기 때문에 (동행명령장 발부에) 조심해야 한다”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에게 동행명령권을 신청하면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조 의원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국회에 4번 왔다. 증인에 대한 소환을 너무 남발해 국회가 가법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며 “여기 나왔다 한들 밝힐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꼬집었다.

반면, 이근태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는 법 앞의 특권, 법 앞의 성역의 상징이

됐다”며 “특권과 성역을 넘어서지 못하면 국민에게 얼굴을 들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를 유지하고 지탱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하는데, 국민이 모두 평등하다는 헌법적 가치를 지켜야 한다”며 “의무를 회피하면서 어떻게 국민에게 의무를 다하라고 하는가”라고 동행명령장 발부에 찬성했다.

김건희 여사 모녀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가 표결에 부쳐진 결과, 과반수 이상을 점한 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이후 장경태, 이성윤, 이근태 의원과 국회 직원은 동행

명령장을 김 여사에게 전달하기 위해 한남동 관저로 향했다.

### ◆ 전달 무산에 野 “성역과 특권”

세 명의 야당 의원들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을 찾았지만 경찰이 미리 설치해놓은 바리케이트에 막혀 동행명령장을 전달하지 못했다.

이근태 의원은 “이 바리케이트는 김 여사를 보호하기 위한 성역이고 특권”이라며 “왜 죄 없는 경찰을 동원해서 성역과 특권의 바리케이트를 치는 것인가. 당장 나와서 국회의 정당한 동행명령장을 수령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성윤 의원은 “무엇이 두려운 것”이라며 “동행명령장을 받지 않으면 국민적 분노와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했다.

이 소식을 들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오후 국정감사를 시작하면서 “동행명령장 전달을 막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라며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 ◆ 법사위 국감은 여야 공방 계속

동행명령장 발부 이후 계속된 국감 질의에도 여야의 공방은 계속됐다. 여당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심우

정 검찰총장을 탄핵하겠다는 것은 보복이고, 검찰의 입지를 축소시키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야당의 검사 탄핵 주진에 대해 “특정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특별한 근거 없이 검사에 대한 탄핵이 시도되는 것은 여기 계신 의원 모두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김 여사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지난 2022년 재·보궐 선거에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현 개혁신당 의원)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공천하는 대가로 (명 씨에게) 상대 후보를 이기는 여론조사를 가져오라고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야당은 검찰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근택 민주당 의원은 “명씨의 진술이나 정황을 비춰 보면 명씨의 뒷배는 김건희 여사라는 합리적 의심이 더 분명해진다”며 “명씨가 김 여사를 등에 업고 22대 총선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많은 사안으로 판단이 된다”고 지적했다. 심 총장은 “창원지검에서 최선을 다해 수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백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 “공정위, ‘아디다스코리아 가맹사업법 위반’ 아무 조치 없어”

## 정무위 국감

80명 넘는 대리점주와 계약갱신 거부  
한기정 위원장 “현재 검토 중” 답변  
곽근엽 대표 ‘주머니 손’ 태도 지적

아디다스코리아의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1년째 표류 중이다. 오늘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는 아디다스코리아의 가맹사업법 위반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정거래위원장을 향한 지적이 나왔다.

21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참석하고 곽근엽 아

디다스코리아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아디다스코리아의 가맹사업법 위반 관련 조사가 진행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앞서 아디다스코리아는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의혹으로 지난 2023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한 바 있다.

문제가 되는 지점은 아디다스코리아가 내세운 ‘퓨처파트너’ 정책이다. 아디다스코리아 측은 지난 2022년 효율적인 유통망 관리를 위해 유통 파트너를 5분의 1로 축소하고, 전략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아디다스코리아는 80명

이 넘는 대리점주와 계약 갱신을 거부했다. 이 외에 기존 대리점을 폐쇄하고 매장들을 직영점으로 전환했으며, 인기 상품을 본사가 독점 판매하는 등 가맹사업법 위반 의혹을 받는 행위를 저지른 바 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2020년부터 아디다스코리아의 영입이 약 140억원, 2021년 69억원, 본사 위주의 정책 개편을 거쳐 2022년에는 746억원으로 이어지며 (정책 개편 후) 10배 이상 증가했다”며 “반면 점주들은 본사가 모든 수익 독점하는 바람에 1명의 점주가 파산했고 50명 넘는 점주들이 적자를 이겨 내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폐

업 선택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향해 “(공정위가) 어떤 조치 했나 보니까 3월 4일부터 8일까지 대리점법 위반행위 등에 대한 직권조사 이후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지만 사실상 아무것도 조치한 게 없다”며 질책했다.

이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현재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현장에 참석한 아디다스전국점주협의회 김정중 점장 역시 다시 한 번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점장은 “108명의 점주 중 절반이 넘는 점주들이 막대한 부채를 떠안고 폐업했고, 그중 7명은 파산했다”며 “(아

디다스코리아의) 경쟁사가 혁신적인 신제품 개발과 탁월한 마케팅으로 매출을 3배 차이로 버리는 동안 아디다스는 비용 절감을 한답시고 개발비 못 쓰게 하고 제대로 된 신제품 하나 없이 오직 비용 절감만 쫓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관기관 정부 관계자분들이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며 “악덕 기업 행태가 근절되고 갑과 을의 을이 상생하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국감 현장에서는 곽근엽 아디다스코리아 대표의 태도 문제도 지적됐다.

국민의힘 유명하 의원은 “곽근엽 증인이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었다”며 “국회에서 저런 식으로 주머니 손 넣고 건들건들 나오는 증인 없을 것”이라며 위원장에게 강력한 경고를 요청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 尹 “새로운 위협 직면... 경찰, 능동적 변화·치안역량 키워야”

‘제79주년 경찰의날 기념식’  
취임 이후 3년 연속 참석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지금 우리는 그동안 없었던 새로운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디지털성범죄, 가짜뉴스, 민생범죄, 아동학대 등에 대한 강력 대응의지를 밝혔다. 또 경찰에게 새로운 위협에 맞서기 위해 능동적으로 변화하고 치안 역량을 키울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개최된 ‘제79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취임 이후 경찰의날 기념식에 3년 연속 참석한 것으로, 현직 대통령의 경찰청사 방문은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79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뉴스1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불특정 다수를 위협하는 이상동기 범죄, 악성 사

기, 마약과 사이버 도박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AI와 딥페이크 등 첨단기술을 악용한 신종범죄와 가짜뉴스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새로운 위협에 맞서기 위해 경찰이 더 빠르게 발전하고 능동적으로 변화하며 더욱 과학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국민이 경찰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새로운 상황에 맞춰 치안 역량을 키우고 발전시켜야 한다”며 “무엇보다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민생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처벌하고, 범주수익과 자금원은 빠짐없이 환수해 범죄 생태계 연결 고리를 근원적으로 끊어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예진 기자 syj@

## 국민통합위 ‘청년마당 300분 토론회’ 성료

AI 기술발전의 혐오범죄 조장 등 주제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국민통합위)가 ‘공감·상생·연대를 위한 청년마당 300분 토론회’를 성황리에 종료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민통합위는 지난 19일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인공지능(AI) 기술발전의 혐오범죄 조장 ▲여성 권익 향상을 위한 노력 ▲부모·자녀 세대 간 사회적 지원의 우선순위 등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청년 100여명이 주제 선정 단계부터 참여했다.

AI 기술발전과 혐오범죄 조장 관련 토론회에서는 “가치중립적이며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악용하는 사람들의 문제”라는 주장과 “AI의 효율성만큼 쉬운

접근성으로 10대 청소년들의 범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여성권익 관련 토론에선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과 임금 격차, 경력 단절, 돌봄 노동 등에서 여성이 여전히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대 간 사회적 지원의 우선순위에 대한 토론은 사전 조사에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의 지원 배분에 대해 팽팽한 의견 차이가 나타났다.

한편 토론회장에 깜짝 방문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여성 권익향상을 비롯해 청년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이 모여 좋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서예진 기자